

대정부 질문서 순직해병 특검 다룬다... 여야 '강대강' 대치

내일 정치·외교·안보 분야서 국무총리, 부처 장관에 질의 세수결손, 의정갈등 등도 예정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원 구성을 마무리한 제22대 국회가 이번 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범야권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특검법'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대정부 질문은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로 포문을 연다.

여야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의

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 의혹,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북러 관계 강화 등에 대해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에게 날 선 질의를 할 예정이다.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의 세수 결손 사태와 감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과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차 전기 제조공장 화재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월 임시 국회 회기가 7월4일까지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전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최대 과제는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 참석해 "특검과 국정조사로 순직 해병의 억울함, 어머니의 한을 풀겠습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고, 죄지는 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7월) 2~4일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2일이 될지,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가급적 빨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6월 3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4일 중 본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다"고 재확인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 국회에서 진상규명의 장을 마련하는 국정조사를 위한 요구서도 지난달 18일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尹 방송장악 저지"

방통위, 10개월 가까이 2인 체제 野 방통위원 추천안에도 임명 지연 본회의서 탄핵안 처리 시 운영 제동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단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치권의 눈길과 발길이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6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방송장악 쿠데타'라는 이유 등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방통위의 공영방송 3사(KBS·MBC·EBS) 임명 선임 계획 의결 시도를 저지하고자 방통위를 방문하고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의 임명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이로써 KBS·MBC·EBS의 이사 및 감사의 공모와 후보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인 체제로 운영 현재 방통위는 열 달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5인의 위원을 정원으로 하는 합의제 기구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 추천(여당 1명·야당 2명)으로 3인이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자신들의 권한으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작년 3월 최민희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으나,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사안이었다며 임명을 지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임기가 끝나고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중요 안건 의결을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민원실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맥락에서 21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탄핵안 처리 시 2인 체제 운영 못해 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 일각에선 탄핵안이 발의되자 김 위원장 체제에서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진행시키고, 탄핵 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처럼 사퇴하는 '폼수'를 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총선에서 패배한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것도 좌파언론의 선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특히, 눈엣가시인 MBC를 '입틀막'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싶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력을 다해 윤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겠다. 위헌적, 위법적인 방통위 2인체제가 저지된 불법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방송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좌편향' 이사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추후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박태홍 기자

'尹 탄핵 청원' 70만명 동의... "총선서 작용한 경고 '여전'"

청원 올라온 지 사흘 만에 법사위 회부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어 법률 위반 대통령 심판하는 것

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로 탄핵 청원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탄핵 사유로 ▲군사법원법 위반(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수사)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평화통일 의무 위반(전쟁 위기 조장) ▲대법원판결 부정(일본 강제징용 전일 해병 강행)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권 침해(후

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를 나열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사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만약 청원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임기 3년 차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원, 그리고 70만명 이상의 동의는 정치권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입법청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청원을 올리거

나 동의할 수 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같이 간편인증, 간편 로그인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 않아 좀 더 '번거로운' 과정이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청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은 22대 총선에서 작용한 윤 대통령에 대한 경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 총선 민심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도 길다. 빨리 끝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불렀다"며 "국민들도 그 힘을 확인했다. 이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우리(청원인들)가 힘이 돼 줄테니 윤석열 정권

탄핵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법사위로 회부된 청원이 본회의로 넘어갈지는 의문이라는 예측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번 청원 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그는 "국민 청원이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만 탄핵안 청구는 국민이 무능한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위반된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검토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